



주간통일정세 2011-51(2011.12.12~12.18)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1-5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정치

● 北고위간부, 공식석상서 또 김정은 언급(12/12, 자유아시아방송(RFA); 연합뉴스)

-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홍선옥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은 지난 10월 말 방북한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에 김정은이 내년에도 김 위원장을 보좌할 것이라고 언급
- RFA가 최근 입수한 한반도관계 대표단의 방북보고서에 따르면 홍 부의장은 2012년을 김 위원장이 활발한 지도력을 보여주고 김정은의 보좌로 힘차게 전진하는 해로 표현
- 그동안 북한 고위인사들이 외국인사와 공식석상에서 김정은에 관한 언급을 자제해온 분위기를 감안하면 김정은이 북한의 2인자로서 위상이 두터워졌음을 보여줌.
- 연합뉴스에 의하면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해외지도부연구담당 국장은 홍 부의장의 이번 언급과 관련해 "김 위원장과 김정은의 '쌍두체제'가 내년 9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말함.

● 김정일, 평양방어사령부 타격훈련 참관(12/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김정은을 대동하고 조선인민군 제966대연합부대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3일 보도
- 제966대연합부대는 북한의 수도인 평양 일대를 방어하는 평양방어사령부로 알려졌으며,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소식을 전하기는 지난 3일 공군 제378군부대 방문에 이어 열흘 만임.
- 김 위원장은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자면 인민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이며 국력인 국력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함.
- 김 위원장의 훈련지도에는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 김경옥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조선인민군 대장인 김원홍·박재경·현철해 등이 수행

● 北에 '대형마트' 등장...김정일 직접 찾아(12/15,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개점을 앞둔 광복지구상



- 업중심을 현지지도 했다"며 이곳을 '슈퍼마켓'이라고 밝혀 대형마트임을 시사
- 중앙통신은 또 이 대형마트의 전신이 평양 제1·2백화점과 함께 북한의 3대 백화점으로 꼽혔던 '광복백화점'이라고 소개하며 '상업중심'이라는 중국식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중국 자본이 투자했을 것이라는 관측
 - 김 위원장은 즉석국수매장, 학용품매장, 섬유매장 등을 돌아보고 외국방문에서 들렀던 상점을 언급하며 이 시설을 조성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혀 지난 5월 방중 때 장쑤(江蘇)성 양저우(楊州)에서 대형할인마트를 방문하고 나서 이 매장의 설립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 김 위원장의 대형마트 현지지도에는 후계자인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외 김경희 당 경공업부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박도춘·최룡해·문경덕 당 비서, 주규창 당 부장, 리재일·박봉주·한광상 당 중앙위 제1부부장 등이 수행했고 내각의 안정수 경공업상과 조영철 식료일용공업상 등이 영접
 - 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평양의 통일거리에 있는 하나음악정보센터도 현지지도 했으며 음악전자도서관과 다통로(멀티채널)감상실, 센터 2층에 있는 하나전자합영회사의 생산현장을 돌아보고 DVD 녹화기 등을 살펴봤다고 전함.
 - 김 위원장의 하나음악정보센터 현지지도에는 후계자 김정은과 김경희, 장성택, 박도춘, 주규창, 리재일, 권혁봉 당 중앙위 부부장 등이 수행

■ 김정일동향

- 김정일, 조선인민군 제966대연합부대 화력타격훈련 지도(12/13, 중 통·중·평방)
- 김정일, 하나음악정보센터와 광복지구 상업중심 현지지도(12/15, 중 통·중·평방)



■ 기타 (대내 정치)

- 조선노동당대표단(단장: 이영철), 12.9 그리스공산당 중앙위 총비서와 담화(12/13, 중통·중방)
- 최영림 총리, 12.13 바닷물공급소와 곱등어(돌고래)관 건설장 현지 요해(12/13, 중통·중방)
- 北-러 '항공탐색 및 구조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12.13 만수 대의사당에서 조인(12/13, 중통·중방)
- 김영남, 12.15 訪北 세계평화연합대표단과 담화(12/15, 중통·중방)

나. 경제

● 北고려항공 내년 유럽직항 무산(12/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내년 북한과 유럽을 직항하는 전세기를 운영하려던 북한 고려항공의 운항 계획이 무산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
- RFA에 따르면 스웨덴의 북한전문 여행사 '코리아 콘솔트'는 옛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재개될 뻔했던 북~유럽 직항노선 개설 계획이 고려항공과 베를린공항 간의 이견으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12일 자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밝힘.
- 이 여행사 관계자는 "양측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고려항공이 베를린 공항에 이착륙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받지 못했다"고 말함.
- RFA는 고려항공이 김일성 생일 100돌을 맞는 내년 4~5월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평양~베를린 직항노선을 운항할 계획이었다고 전함.

● 北 강성대국 위해 지방도 한창 '공시중'(12/14, 연합뉴스)

- 북한이 내년 '강성대국' 진입을 앞두고 평양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도시 재정비,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각종 건설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연합뉴스가 14일 북한매체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평안도, 양강도, 자강도 등 지방에서 주택, 공공건물 등의 신축과 도로 재정비 등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 평안남도 평성시 보덕동, 구월동 일대에 540여 가구의 5~7층짜리 아파트가 1년 남짓한 기간에 건설됐다고 평양방송이 최근 보도했고, 조선중앙방송은 순천, 북창, 덕천지구를 비롯한 평안남도내 탄광 지구에 2천600여 가구의 탄부용 살림집(주택)이 완공됐다고 전함.
- 북한 매체들은 양강도 김정숙군, 자강도 만포시 등에서도 수백 가구의 주택이 신축됐고, 평안북도 남신의주 지구에 350여 가구의 주택이 신축될 예정이라고 전함.



- 북한은 내년 김정일 생일(2월16일)에 즈음해 희천1호발전소, 김일성 생일(4월15일)에는 희천2호발전소를 완공할 계획 아래 막바지 공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등 청년들을 동원해 백두산 선군청년1호, 2호 발전소를 건설 중이며, 청천강 계단식발전소(평북), 원산군민발전소(강원도) 건설도 서두르고 있음.
 - 북한이 이처럼 평양뿐 아니라 전역에서 각종 건설공사를 벌이는 것은 내년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과 강성대국 진입을 앞두고 주민에게 시각적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후계자 김정은을 부각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한 대북소식통은 "최근에 북한을 나온 탈북자들에 따르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 총책임자가 김정은이라는 설도 있다"며 "주민들에게 강성대국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후계자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하기 위해 전역에서 삼질하는 것"이라고 말함.
- **北 '24시간 전기공급' 공문...반응은 냉소적(12/14, 오늘의북한소식)**
 - 북한당국이 '강성대국' 첫해가 시작되는 내년 1월1일부터 평양시에 매일 24시간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부문에 전파한 것으로 알려짐.
 - 대북 인권단체인 (사)좋은벗들이 운영하는 북한연구소는 14일 발간한 소식지 '오늘의 북한소식'(433호)에서 북한 내 대북소식통을 인용, 평양시당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당 회의내용을 각 부문에 전달했다고 전함.
 - 소식지에 따르면 이번 공문에는 전기공급 외에도 '식량배급 전량 보장' 등의 내용도 담겨 있지만, 소식을 접한 공무원과 주민은 냉소적인 반응
 - 중앙당의 한 간부는 "당은 2012년부터 김정은 대장의 영도에 따라 강성대국의 첫발을 내디디고 새로운 면모로 시작된다고 선전하고 있다. 자강도 희천발전소의 전력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아직 준비가 안됐다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말함.
 - **국제적십자사 내년 대북예산 830만 달러(12/15,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내년 대북사업 예산으로 830만 달러를 배정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
 - IFRC는 최근 발표한 '2012~2015 대북사업계획서'에서 내년부터 4년간 대북사업에 매년 평균 830만 달러씩, 모두 3천350만 달러를 배정
 - IFRC는 또 2015년까지 북한 주민 20만 명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북한 내 리(里) 단위 진료소 및 학교 3천여 곳에 공중화장실을 지을 계획
 - **北환율 '출렁'...1주일 새 20% 이례적 급락(12/16, 연합뉴스)**
 - 최근 1천 원대까지 폭등했던 중국 위안화에 대한 북한 원화 환율이 1주일 만에 800원대로 급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북한 외환시장에 밝은 대북소식통은 16일 "현재 위안화 대비 북한 돈



환율은 헤산 지역에서 780~800원, 청진 지역에서는 800원대"라며 " 불과 1주일 전에는 위안화 환율이 1천원까지 올랐지만 지금은 갑자기 내려간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1주일 전까지만 해도 함경도 지역에서 북한 위조지폐가 시장에 대량으로 풀렸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그 소문이 상인들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전국에 퍼져 외화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
- 하지만 지금은 그 소문이 유언비어로 밝혀져 천정부지로 올랐던 환율이 거품이 빠지면서 하락하는 추세라고 소식통은 덧붙임.
- 이와 관련, 한 탈북자는 "평양에는 북한 환전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큰손'들이 몇 명 있다"며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이 큰손들이 각 지역에 있는 자신의 심복들을 통해 '내년 외화사용 금지'와 같은 유언비어를 퍼뜨려 환율을 떨어뜨린다고 전함.
- 이 탈북자는 "북한의 거물급 돈장사꾼(환전상)들은 강력하게 조직화 된 데다 권력층까지 매수해 루머를 생산·유포한다"며 "영세 환전상들은 이런 '시장통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자그마한 변화나 소문에도 큰 폭의 환율 파동이 일어난다"고 설명

● "北서 연탄값 급등...이틀치가 월급 초과"(12/16,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에서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연탄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이 16일 보도
- 중국 단둥에 나온 한 북한 주민은 이 방송에 "올해 다른 물건값이 오르면서 석탄가격도 덩달아 올랐다"며 "구멍 8개짜리 구멍탄(연탄) 한 개에 400원 정도이고 구멍이 10개짜리 구멍탄은 600원 가량 한다"고 전했다.
- 이런 연탄값은 지난 11월보다 30%나 상승한 것으로, 월급이 3천원 가량 인 도시 근로자가 파울 엄두를 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RFA는 설명
- RFA는 북한 주민 대부분이 한파에도 비싼 연탄 대신 장마당에서 나무를 사들여 취사 및 난방을 하고 있다고 전함.

● "北, 중국산 제품 반입 통제"(12/17, 자유아시아방송(RFA))

- 최근 북한 당국이 중국산 물품의 반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 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
- 방송은 북한 당국이 다른 사람의 여권을 빌려 중국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북한으로 보내는 보따리 상인의 편법 통관을 막고 있고, 북한 기업소의 수입허가를 빌려 물건을 수입해 오던 수법도 모두 차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북한 당국의 이번 조치는 외화의 중국 반출을 막고 강성대국으로 선포한 2012년도 식량배급 정상화에 앞서 장마당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방송은 논평
- 반면 국영상점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는 등 북한 당국이 장마당을 폐쇄하거나 개인의 장사를 금지하는 등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관광 전문 첫 온라인여행사 오픈(12/18,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주체여행사'라는 이름의 이 회사는 18일 홈페이지(www.juchetravelservices.com)를 통해 북한 국영관광회사인 조선국제여행사로부터 여행 관련 권한을 위임받아 지난달 22일부터 영업을 시작했다고 밝힘.
- 이 여행사는 오프라인 여행사보다 비용이 저렴한 것이 장점이라고 소개하며 1인당 여행가격을 4일 기준 805유로, 7일 1천75 유로, 14일 2천 20유로라고 설명
- 북한 고려항공과 제휴해 내년 5월 여객기를 타고 평양과 백두산, 함흥, 금강산, 개성과 비무장지대 등을 여행하며 승무원들과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상품도 만들었다고 소개
- 이 여행사는 그러나 자신들이 어디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지, 또 북한당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음.

■ 기타 (대내 경제)

- 평양시 일꾼-당원 등 '남포↔평양 海水 수송관 2단계공사' 추진 보도(12/12, 평방)
- 北,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지질박물관' 건립 선전(12/13, 중통)
-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 2호발전소 물길굴 관통 및 확장과 콘크리트 피복공사에 진입(12/13, 중방)
- 자강도 희천시, 남새온실 10개동 새로 건설(12/14, 중통)
- 北 국가과학원 조종기계연구소, CNC공작기계 제작에 필요한 사보장치(교류전동기 고정밀 속도조종 실현) 국산화에 성공(12/14, 중방)
- 北 각지 협동농장들, '종합논토양관리기계' 도입으로 내년 농사준비에서 성과 이룩(12/14, 중방)
- 2012년 김일성 생일(4.15)을 앞두고 도로(아스팔트 포장, 가로등 설치, 컬러보도블록 교체 등)와 거리들 전면적 일신(건물들 도색, 살림집 지붕과 창문 교체 등) 등 "평양 시내 새단장" 선전(12/15, 조선신보)

다. 사회·문화

● '김정은 상고머리' 北젊은이들에 인기(12/13,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조선중앙TV)

- 북한의 젊은 남성들 사이에 후계자 김정은의 헤어스타일이 인기를 끄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작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개되면서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김정은은 상고머리 스타일이며 북한에서는 젊은 남성들이 이 스타일을 선호해 '청춘머리'라고도 부르고 또 사람을 혈기왕성하게 보이게 한다고 해 '패기(霸氣)머리'라는 별칭을 갖고 있음.

- 북한 최고의 목욕시설인 '창광원'을 자주 찾는다는 평양 주민 김문혁(30)은 12일 조선중앙통신에 "상고머리 형태는 패기와 열정이 있어 보이고 단정하면서도 고상한 감을 주기 때문에 마음에 든다"고 예찬론을 펴.
- 지난 9월22일 북한의 노동신문은 "패기있게 쪽 올려깎은 높은머리를 한 청년은 보기에다 정신이 번쩍 들어 노동계급의 멋이 안겨왔고, 상고머리를 한 청년의 단정한 머리단장은 또 그대로 대학생다웠다"고 전함.
- 그러나 북한의 젊은 남성들이 단정하고 패기있어 보이려고 짧은 머리 형태를 선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 북한 보건성 피부병예방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04년 조선중앙TV에 출연해 위생적인 이유에서 머리카락의 길이가 1cm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권함.

● "北진료소 30% 기초의약품도 구비 못 해"(12/13,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북한 진료소의 30%가 예산 부족으로 기초 의약품조차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함.
- IFRC는 최근 '보건혜택 불평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의 보건시설 이용이 매우 제한되고 있고 농촌과 도시의 보건혜택 격차가 크다며 이같이 밝힘.
- IFRC는 "북한의 농촌 주민들은 의약품을 구하거나 치료를 받으려고 몇 시간 이상 걸려 시나 도의 병원으로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의 열악한 교통체계도 농촌 주민들이 보건혜택을 받는데 장애요인으로 꼽음.
- IFRC는 그동안 북한 전역에서 2천500개의 응급진료소를 지원하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했으며 이 조치로 북한 주민들이 농촌의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함.

● WHO "北말라리아 환자 10년 전보다 90%↓"(12/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내 말라리아 발병 건수가 지난 10년간 계속 줄어들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서를 인용해 14일 보도
- WHO는 '2011 세계 말라리아 보고서'에서 북한을 말라리아 '퇴치 전 단계'(pre-elimination)에 있는 나라로 분류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1만3천520명으로 전년도 1만4천845명보다 1천300여명이 줄었고 2001년 14만4천명보다 90% 이상 감소
- 보고서를 작성한 WHO의 로버트 시블스키스 박사는 "말라리아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북한 당국의 정책이 발병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



- 했다"고 전함.
- 북한 당국은 지난해 세계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기금(Global Fund)으로부터 794만 달러, WHO로부터 4만2천 달러를 각각 지원받았으며 이 가운데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180만 달러의 예산을 집행
 - WHO는 "북한은 지원받은 달러로 30만 개의 살충 처리된 모기장을 배포하고 2백만 명을 대상으로 실내방역을 시행했다"고 전하면서 "발병 의심 환자들의 혈액을 채취해 진단했으며 1만5천400명의 말라리아 환자를 치료했다"고 소개
- **"北 아리랑공연 내년엔 4월 개막"(12/14, 연합뉴스)**
 - 북한이 내년 4월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15)을 맞아 집단체조 '아리랑'을 공연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미국 내 북한 전문여행사인 '뉴코리아투어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리랑 공연은 내년에는 4월과 8월, 9월 초 열릴 예정
 - 연인원 10만 명이 동원되는 아리랑 공연은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을 기념해 2002년 4월 처음 선보였고, 수해로 취소된 2006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이어지고 있음.
 - **北간부 사생활 들여다보니 마약장사·불륜(12/15,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함경남도 보위부와 검찰소, 청년동맹 간부 여러 명이 20대 여성과 부화관계(불륜관계)를 맺고 마약장사를 한 사건이 당국에 적발됐다고 15일 전함.
 -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올해 27세인 한 여성이 보위부 간부와 수시로 성관계를 맺고 '빙두(마약을 일컫는 은어)'를 넘겨받아 국경지역에서 팔았다"고 말함.
 - 이 여성은 2006년부터 마약을 양강도 해산시와 삼지연군, 김형직군에서 팔았고, 유통된 마약은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10kg이나 된다고 RFA는 전함.
 - 북한에서 일반 주민뿐 아니라 간부들의 일탈현상이 이어지는 것은 서구 문화의 영향 등으로 사회기강이 그만큼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줌.
 - 대북소식통은 "북한 간부들이 범죄에 연루돼 숙청될 경우 시장에서 소문이 빠르게 퍼진다"며 "북한 에서 마약과 성 문란 행위가 늘어나면서 간부들의 부패도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함.
 - **北에서 혁명시인 리찬의 반신상 건립(12/15, 조선중앙통신)**
 - 일본강점기 예술인 조직 '카프(KAPF)'의 대표시인인 고(故) 리찬의 반신상이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함남일보사에 14일 세워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전함.
 - 중앙통신은 "조선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인 카프에서 활동한 그는 1946년 4월 김일성 주석 앞에서 '김일성 장군 찬가를 읊어 사람을 격동시켰다'고 칭송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전국 학위학직 소유자들'의 과학연구 성과전시회(학위학직소유자들이 출품한 430여건의 과학기술성과자료, 400여종의 현물과 560여종의 도서들 전시)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12/12, 중통·중방)
- 北 피바다가극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가극 '양산백과 축영대' 공연, 12.10 후난성 창사시에서 진행(12/13, 중통)
- 예술영화 '소원'(조선예술영화촬영소 제작) 시사회, 12.15 김영남·최영림 등 참가 下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12/15, 중통)

2. 대외정세

가. 일반

- **北, 90년대 파키스탄 軍간부에 50만 달러 뇌물(12/12, NHK)**
 - 북한이 1990년대 파키스탄의 군(軍) 간부에게 거액의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NHK 방송이 12일 보도
 - 이 방송은 파키스탄 언론을 인용해 1990년대 파키스탄 정보기관의 책임자와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지아우딘 씨가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이 자신에게 50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고 전함.
 - 그는 "뇌물을 건넨 북한 군인은 '파키스탄 정부 요인에게 현금을 건네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북한 정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힘.
 - 파키스탄은 1993년 당시 부토 총리가 북한을 방문했으며, 파키스탄이 핵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은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는 협력관계를 강화했던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北 "이란 핵문제 대화로 해결해야"(12/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이란 핵문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
 - 중앙통신은 이날 낸 논평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이란의 원유와 가스, 은행에 대해 전례없이 강도높은 제재를 확대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제재와 압력은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
 - 통신은 또 "미국과 서방이 이란 핵문제를 주장하며 중동 정세를 최악의 사태로 몰아가는 속심은 이란을 말살하고 현 이슬람교 제도를 전복하려는 것"이라며 "미국과 서방의 대이란 제재와 압력의 목적은 핵전파(확



산) 방지에 있는 것이 아니다"고 비난

● **北 리근 미국국장 중국 방문(12/13, 연합뉴스)**

- 북한의 리근 외무성 북미국장이 13일 중국을 방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리 국장은 이날 오전 고려항공 JS151편을 타고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해 준비된 차량을 타고 차오양(朝陽)구에 있는 북한대사관으로 향했다.
- 리 국장은 북한의 핵 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수행해 지난 7월과 10월 뉴욕과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대화에 참석했던 인물로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3~14일 신임 인사차 방중한다는 점을 들어 북미간 접촉 가능성도 제
- 그러나 리 국장은 공항에서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함.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신임 인사차 짧게 방중을 하는데다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리 국장의 위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실제 북미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뉴스는 전함.

● **英, 탈북자 망명기준 강화(12/14, 미국의소리(VOA))**

- 영국 내무부 산하 국경청이 최근 북한인의 망명을 심사하는 기준을 강화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전함.
- 국경청은 최근 발표한 지침서에서 "북한인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에 거주할 수 있고 대부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때문에 망명 신청이 거부될 개연성이 크다"며 "망명을 신청할 자격이 되더라도 개인적으로 박해를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보호해줄 나라가 없다는 점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
- 영국 정부는 2006년 북한인에 대한 망명 기준을 우호적으로 밝힌 지침서를 발표한 뒤 그 기준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VOA는 소개
- 실제로 영국은 2009년에는 북한인 5명에게만 망명을 허용했고 지난해에는 망명을 전혀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VOA는 "영국이 망명 지침을 강화한 것은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이 이 사실을 숨기고 다시 영국에 망명을 신청한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라고 분석

● **"중국, 北에 기상관측장비 지원키로"(12/14,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 정부가 유엔 산하 세계기상기구(WMO)를 통해 컴퓨터를 이용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 4대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
- WMO 관계자는 "기상관측장비 지원의 정확한 시점과 지원대상 지역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내년 3월 중국 정부와 북한 기상수문국 당국



자들이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말함.

- 이와 함께 WMO는 내년 초 인도에 북한의 기상 전문가들을 초청해 가뭄 및 홍수 정보 등에 대한 연수를 진행할 계획

● **北美, 베이징서 식량지원 협의 개시(12/15, 연합뉴스)**

- 북한과 미국이 15일 베이징(北京)에서 식량지원 협의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양측 대표단이 오늘 협의를 시작한다"고 확인하면서 "애초 이틀 정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회담 진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할 수 있다"고 밝힘.
- 미국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도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14일 북미 식량지원 협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눌런드 대변인은 북한에 '영양지원(nutritional assistance)'을 제공하는 문제를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식량이 아닌 영양보충제나 비타민 등이 포함된 지원을 북한에 제공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 **北·中 부총리 화동·관계 강화 다짐(12/16, 신화통신)**

- 북한의 한광복 내각 부총리겸 전자공업상이 15일 베이징을 방문, 장더장(張德江)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화동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함.
- 한 부총리는 북한은 전통적 우호관계 강화와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중국 국민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함.
- 장 부총리는 북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며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우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또 한 부총리에게 지난 14일 폐막한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결과를 설명하며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구조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임.
- 한 부총리는 중국정부 초청으로 중국을 실무방문

● **北美, 베이징 식량지원 협의 마쳐(12/16, 연합뉴스)**

- 북한과 미국이 16일 이틀에 걸쳐 베이징에서 진행된 '식량지원 협의'를 마쳤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미국의 로버트 킹 대북인권 특사는 이날 협의를 마친 후 한 쇼핑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고 결과를 본국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짧게 말했으며, 협의 성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
- 군량미 전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미국은 이틀에 걸친 이번 협의에서 쌀이나 밀가루 같은 곡물이 아닌 비타민과 영양 보충용 비스킷 등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강력하고 투명한 모니터링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이번 협의에서 '식량 지원' 대신 '영양지원(nutritional assistance)'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



- "美대북지원-北 UEP잠정중단 금주 내 발표"(12/18, AP통신)
 - 미국이 이번 주내에 북한에 대한 상당한 식량 지원을 발표하고 북한도 이후 수일 내에 우리농 농축 프로그램(UEP)을 잠정 중단(suspend)하겠다는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18일(현지시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
 - 이 통신은 또 북미 양측이 여름부터 진행된 협상을 통해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실험 중단, 2009년 추방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북한 재입국, 남북대화 재개 등에는 이미 합의했다고 전함.
 - AP통신은 미국의 대북지원은 빠르면 19일 워싱턴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함.
 - 또 이번 합의에 따라 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진 제3차 북미 대화가 수주 내 6자회담 재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AP통신은 미국의 대북지원 발표시 좀 더 나은 모니터링 방법 등에 대한 합의 내용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
 - 빅토리아 놀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영양 지원"으로 규정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으며, 미국의 대북지원 품목은 쌀이나 밀가루 등의 곡물이 아닌 영양보충용 비스킷과 비타민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통신은 전함.

나. 6자회담(북핵)

- 北 "선 핵포기 요구는 음흉한 속심"(12/12,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연합뉴스)
 - 북한은 12일 미국이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군사적 대결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비난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에 게는 그 어떤 위협 공갈도 통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 호전세력들은 우리의 '선핵포기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서는 대화를 진전시키기 힘들 것이라고 떠들었다"며 "여기에는 음흉한 속심이 깔려 있었다"고 주장
 - 노동신문은 "(미국은) 선핵포기 문제를 조미관계의 현안으로 전면에 내세워 우리와 대화를 복잡한 상황으로 끌고 가고 시간을 무한정 끌면서 군사적 대결을 계속 격화시키지는 것"이라며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임의의 순간에 손쉽게 먹어치우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지는 것"이라고 밝힘.
 - 북한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이 6자회담 재개의 사전조치로 요구하는 우리농축프로그램(UEP) 등의 핵개발 프로그램 중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연합뉴스는 밝힘.



● 潘총장 "6자회담 조속히 재개돼야"(12/15,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4일(현지시간)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반 총장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열린 송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6자회담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행되지는 못했지만 공동선언도 발표됐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자신의 취임 이후 한반도 정세가 진전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의 긴장관계가 더욱 악화됐다"고 상기시키면서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 이어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지속될 수는 없다"면서 미국과 중국 등 모든 6자회담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

3. 대남정세

● "南, 북침용 무기수입 세계 3위" 대남비난(12/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방송은 12일 "최근 남조선 괴뢰들이 무기수입에서 세계 3위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폭로됐다"며 "국방기술품질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미국 등으로부터 이지스 구축함, 신형탱크, 미사일, 정밀유도무기 등 현대적 무기를 계속 끌어들이었다"고 전했다.
- 중앙방송은 "괴뢰들은 올해 미국으로부터 F-15K 전투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선제공격 무기를 대량 끌어들이었다"며 "다음해 신형 전투기, 직승기(헬기), 고공 무인정찰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을 수입하는데 사상 최고인 124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방송은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이 공화국에 대한 침략전쟁 준비를 다그치기 위해 전쟁장비 구입에 피눈이 돼 날뵈다"고 주장

● "언론쿠데타" 北 종편 개국 또 비난(12/12,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북한은 12일 종합편성채널(종편)이 이달 초 개국한 것을 '언론쿠데타'라고 비난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불순한 기도가 어린 언론쿠데타'라는 글에서 종편 개국에 대해 "남조선 당국의 이번 망동은 극우 보수언론들을 내세워 진보언론들을 질식시키고 여론을 오도함으로써 민심의 향거를 가로막고 통치위기를 모면해보려는 불순한 기도의 산물"이라고 주장
- 노동신문은 이어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미디어관련법과 관련해 "보수신문들이 방송 부문까지 독점하게 할 심산으로 언론관련법 개



정안이라는 것을 꾸며냈다"고 비난

● **北, 금강산특구에 외자기업 첫 승인(12/13, 연합뉴스)**

- 북한이 추진 중인 금강산 특구에 첫 외자기업이 승인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13일 "홍콩과 조선족 자본이 투자한 외국기업인 조선 금강산금라선박 관광유한회사가 북한의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 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
- 이 기업은 홍콩 자본이 미화 80만 달러(9억1천700만원 상당), 조선족 자본이 20만 달러를 각각 출자해 100만달러의 등록자본금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짐.
- 이 기업은 크루즈 선박 운영을 통해 홍콩을 비롯해 중국 동부 항구에서 북한으로 관광객을 실어 나르고 금강산 특구에서 카지노, 면세점, 호텔 영업을 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이 전함.
- 이 기업은 북한 당국이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무시한 채 발효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처음으로 승인한 외자기업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되며, 현대아산 측은 특히 자사의 금강산 독점권을 북측의 금강산특구법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어서 금강산금라선박 관광유한회사의 승인은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또다시 이대통령 원색비난(12/13, 우리민족끼리)**

-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재개한 북한이 13일 원색적인 표현으로 이 대통령을 또 공격
-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궁색한 처지에 놓인 자들의 위안광대극'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달 '소설 김정일'을 쓴 탈북작가 림일씨에게 격려편지를 보낸 것을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에서 "리명박이 쉬파리처럼 여기에 넉떡 붙어 단급이 있다고 감사까지 표시했으니 실로 돌부처도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번 격려편지 내용은 반북대결광기를 더욱 고취하기 위해 벌려놓은 위안광대극이라고 밖에 달리는 말할 수 없다"고 주장
-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쥐귀에 경읽기'라는 제목의 또 다른 글에서도 최근 명진 스님이 '서이독경(鼠耳讀經)'이라는 부제로 발간한 신간서적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를 언급하며 이 대통령에 비난
- 우리민족끼리는 이 대통령을 가리키는 '남조선 당국자'가 민심의 요구에도 귀를 막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강행처리했다며 "오죽하면 현 당국자가 리승만을 짚짜먹는 '특등사대매국노', 히틀러를 능가하는 '리틀러'라는 별칭을 다 받았겠는가"라고 비난

● **민화협, 北안주시에 밀가루 254t 지원(12/13, 연합뉴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는 14일 오전 북한 평안남도 안



주시 취약계층에 밀가루 254t, 분유 4t 등 총 1억7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 개성 육로를 통해 지원되는 물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계평화여성연합, 한국YMCA연합회 등의 후원금으로 마련되었다고 뉴스는 전함.

● 경기도북부청 내년에 北전염병 방역에 60억 지원(12/14, 연합뉴스)

- 14일 경기도북부청에 따르면 2012년도 남북교류협력 사업비는 올해와 같은 60억 원이 편성되어 총 13개 사업이 추진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이 중 말라리아 남북 공동방역비는 10억 원이 배정되었으나, 내년부터 지원 범위를 다른 법정 전염병으로도 확대하고 10억 원을 추가하기로 함.
- 경기도북부청은 2007년부터 남북 접경지역 말라리아 공동 방역을 위해 북한에 물품을 지원했으며 국내 환자 감소로 효과를 보자 올해 지원 규모를 10억 원으로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림.
- 경기도북부청은 내년에도 개성지역 양묘장 조성사업, 황해북도 지역 농업 현대화·의료 협력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수재 지원 등 긴급식량지원사업, 영유아 지원사업도 병행할 예정

● 北 "남측 등탑 설치 당장 철회해야"(12/14,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14일 우리 당국이 애기봉에 이어 등탑을 2곳에 더 설치할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의 철회를 요구
-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남조선 국방부가 반공화국 심리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 군사분계선 주변 2곳에 등탑을 세울 것을 획책하고 있다"며 "호전광들은 우리 측 지역이 보이는 곳에 이 심리전 수단을 세워 이달 중순부터 가동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
- 중앙방송은 "이미 전부터 남조선 괴뢰들은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가금리의 애기봉에 등탑을 세우고 우리에게 대한 심리모략전에 악랄하게 이용했다"며 "지난해 말에도 2004년 6월 북과 남 사이의 합의를 파기하고 탑의 등불을 켜는 놀음을 강행했다"고 비난

● 문형진 통일교 세계회장, 방북 마치고 귀국(12/16, 연합뉴스)

- 문선명 통일교 총재와 김일성 주석 간의 만남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9일 첫 방북 길에 오른 문 회장은 이날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
- 통일교에 따르면, 문 회장은 9일 평양에 도착해 11일 세계평화센터에서 '문선명 총재 평양 방문 20돌 기념행사에 참가했으며, 15일에는 만수대 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환담하는 등 북측 인사와 남북 교류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음.
- 또 문 총재의 생가가 있는 평안북도 정주를 방문해 한국에서 지원한 밀가루의 보급 상황을 확인했고 김일성 주석의 만경대 생가도 들렀으며, 앞서 문 총재는 지난달 밀가루 600t을 정주에 지원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등탑놀음 엄중사태 초래" 위협 강화(12/18,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북한은 우리 군이 애기봉 등 전방지역 세 곳에 성탄트리 모양의 등탑을 세우기로 한 데 대해 '북침전쟁 도발' '엄중사태 초래'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과 위협을 강화
- 18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노동당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 17일 개인필명 논평에서 "등탑놀음은 위험천만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조선괴뢰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
- 특히 "이번 심리모략전은 예측하기 어려운 파국적 후과를 몰아오는 모험으로 될 뿐"이라며 "남조선보수당국은 그 속에서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하는 비극을 맞을 수 있다"고 위협
- 북한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8일 "(남측) 정부와 군 당국은 왜 국민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가며 자꾸 하느냐"는 내용이 담긴 '점등불은 전쟁불'이라는 제목의 개인투고를 상세히 소개

■ 기타 (대남)

- 【南北 여성단체 공동결의문(12.14)】 '2012년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어나가는 희망의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3개항 결의문' 발표(12/ 14, 중통·중방)
 - 첫째,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주역으로서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
 - 둘째,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실천에 적극 떨쳐나설 것임.
 - 셋째,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과 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적극 연대해 나갈 것임.
- 北, "南側이 유연성 타령을 늘어놓은 때로부터 몇 달이 흘렀지만 南北관계에서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며 "기만적 말장난 중단과 대결정책 철회" 촉구(12/14, 중통·민주조선)
- 我軍의 백령도·연평도 '해상사격훈련'(12.12)에 대해 "북침전쟁광증"이라며 "연평도의 그 불바다가 청와대의 불바다로 타번지게 될 것"이라고 비난 및 '불바다' 위협 持續(12/15, 중통·민주조선·평방)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선 핵포기 요구는 음흉한 속심"(12/12)

- 북한은 12일 미국이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군사적 대결을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음.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우리에게는 그 어떤 위협 공갈도 통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 호전세력들은 우리의 '선핵포기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서는 대화를 진전시키기 힘들 것이라고 떠들었다"며 "여기에는 음흉한 속심이 깔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 노동신문은 "(미국은) 선핵포기 문제를 조미관계의 현안으로 전면에 내세워 우리와 대화를 복잡한 상황으로 끌고 가고 시간을 무한정 끌면서 군사적 대결을 계속 격화시키자는 것"이라며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약화시키고 임의의 순간에 손쉽게 먹어치우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음.
- 북한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이 6자회담 재개의 사전조치로 요구하는 우리농축축프로그램(UEP) 등의 핵개발 프로그램 중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됨.
- 노동신문은 이어 미국이 남한과 한반도 주변에서 항공모함, 잠수함 등으로 훈련해온 것을 거론하며 "미제는 끊임없는 전쟁연습을 통해 북침 핵전쟁 준비를 최종적으로 검토완성하고 임의의 순간에 우리 공화국에 핵 선제타격을 가하려고 기도했다"고 비난했음.
- 노동신문은 또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사소한 양보도 하지 말고 맞서 싸워야 한다"며 "군사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적들과 맞서 싸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 "3차 북미대화 22일째 가능성.. '식량협'의 관건"(12/15)

- 미국은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진행될 북한과의 '영양지원(nutrition assistance)' 협의에서 북한이 그동안 고집해온 '쌀 지원' 주장을 철회하고 지원물자의 군사적 목적의 전용을 감시할 모니터링 요원의 규모를 미국이 제시한 대로 받아들이면 3차 북미대화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14일(현지시간) 알려졌다.
- 또 3차 북미대화가 열릴 경우 비핵화 사전조치의 핵심사항인 우리농축축프로그램(UEP)의 섯다운(폐쇄)과 관련된 '매우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보장되는 등 북한의 진정성이 확인돼야 6자회담의 재개가 가능하다는



-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음.
- 북핵 현안에 정통한 북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의 로버트 킹 대 북인권특사와 리근 북한 북미국장은 15일(베이징 현지시간) 회동해 식량지원(미국서는 '영양지원'으로 지칭) 문제를 협의하며, 관건은 지원의 종류와 모니터링 방식으로 요약되고 있음.
 - 한 소식통은 "북한이 지원품목으로 쌀을 고집하지 않고 미국이 제시한 유아용 비스킷이나 분유 등을 수용하고 모니터링 요원 규모도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된다"면서 "북한이 시의적절하게 협의에 응한 것을 보면 긍정적인 입장이 나올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익명을 요구한 미국 국무부 관계자도 킹 특사와 리근 국장 간 베이징 회동 사실을 확인했음.
 - 외교소식통은 "식량지원 문제와 비핵화 문제가 분리돼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베이징 식량지원 협의가 순조롭게 될 경우 약간의 과정을 거쳐 북미 3차 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기적으로는 오는 22일께를 전후해 회담을 갖는 방안이 양국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회담장소로는 지난 10월 2차 북미대화가 열린 제네바나 동남아의 한 도시, 또는 베이징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 외교소식통은 이어 "3차 대화에서 북한이 UEP 문제와 관련해 섣다른을 받아들이더라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요원의 방북과 향후 활동 범위, 그리고 사찰대상 확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6자회담은 호흡이 다른 상황이며, 전적으로 북한의 반응에 따라 일정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재 6자회담 참가국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급적 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북한이 진정성을 확인할 '명확한 시그널'을 보낼 경우 6자회담을 내년 2월초께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지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이 북한의 6자회담 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을 내년초 미국에 초청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이 소식통은 "미국 정부에 비자발급을 신청하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 **中외교부장, 美 6자 수석대표 접견(12/15)**
- 중국 외교부의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15일 "양제츠(楊潔지<兼대신 虎들어간簾>) 외교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미국의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났다"고 확인했음.
 - 양 부장과 우 특별대표는 14일 별도로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회동했음. 류 대변인은 이번 회동에서 "중국과 미국 양측이 6자회담의 재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고 소개했음.
 - 그는 그러면서 "중국 측은 데이비스 특별대표에게 6자회담을 통해 한반



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장기적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국 측은 가능하면 조기에 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 류 대변인은 이어 "6자회담의 재개가 관련된 각 측의 공동 이익에 들어 맞는다"며 "공동 노력을 통해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가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나. 미·북 관계

● 美하원, 한국전 납북자 송환결의안 만장일치 채택(12/14)

-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납치·억류된 전쟁포로와 실종자, 민간인 납북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 제376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인 민주당 찰스 랭글 하원의원이 지난 7월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이 10만 명이 넘는 남한의 민간인을 강제로 납치해 억류 중인 사실을 인정하고 제네바 협약에 따라 이들을 즉각 가족 품으로 송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또 북한이 민간인 납북자의 생사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즉시 가족 상봉 또는 유해 송환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음.
- 이 결의안 발의자로는 공화당 20명, 민주당 37명 등 모두 57명의 하원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음. 결의안이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쟁포로는 물론 북한이 강제 납북한 민간인에 대한 송환문제가 국제 현안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또 결의안은 미국 정부가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북한에 제기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앞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양자 대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의제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음.
- 이 결의안은 지난달 30일 하원 외교위원회 아·태 소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음. 일반적인 절차로는 외교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지만 이 결의안은 곧바로 본회의에 올라왔음.
- 미 하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초당적 법안의 경우 통상적인 심의절차를 밟지 않고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규칙적용정지'(Suspension of the Rule) 제도가 있음. 이 결의안도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것임.
- 하원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넨 의원은 이날 결의안 제안설명을 했으며, 랭글 의원은 직접 찬성토론을 했음.
- 한편, 그동안 이 결의안을 추진해 온 납북자가족회의(회장 이미일)를 비롯해 한국과 미국내 관계자들은 미 하원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이 통과되는 장면을 지켜봤음. 로스-레티넨 의원은 제안 설명 도중 이 회장 등을 거론하기도 했음.
- 앞서 이들은 미 하원 앞에서 결의안의 의미와 향후 활동 계획 등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음. 또 랭글 의원도 결의안 통과 뒤 별도로 기자회견을



갖고 결의안 통과 과정과 의미 등에 대해 견해를 밝혔음.

● 北美, 베이징 식량지원 협의 마쳐(12/16)

- 북한과 미국이 16일 이틀에 걸쳐 베이징에서 진행된 '식량지원 협의'를 마쳤음. 미국의 로버트 킹 대북인권 특사는 이날 협의를 마친 후 한 쇼 핑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고 결과를 본국에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짧게 말했음. 그러나 그는 협의 성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 군량미 전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미국은 이틀에 걸친 이번 협의에서 쌀이나 밀가루 같은 곡물이 아닌 비타민과 영양 보충용 비스킷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강력하고 투명한 모니터링 보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은 이번 협의에서 '식량 지원' 대신 '영양지원(nutritional assistance)'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썼음.
- 이날 협의는 북한의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베이징시 차오양(朝陽)구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음. 리 국장은 오전 9시께 차량을 타고 미 대사관에 들어가 오전 11시30분께 나왔음. 상호 주의 원칙에 따라 전날 오전에는 킹 특사가 같은 차오양구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방문했었음.
- 킹 특사는 이날 밤 6시25분(현지시간) 유나이티드에어라인(UA) 항공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직행할 예정임. 리 국장도 17일 고려항공 정기편을 타고 귀국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16일 협의에서는 어떤 결론도 나지 않을 것"이라며 "그(킹 특사)가 돌아와 하는 보고 내용을 들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있던 2009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중단했음. 이번 식량협회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차 북미 고위급 대화를 여는 것과 관련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음.

다. 중·북 관계

● 北 리근 미국국장 중국 방문(12/13)

- 북한의 리근 외무성 북미국장이 13일 중국을 방문했음. 리 국장은 이날 오전 고려항공 JS151편을 타고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해 준비된 차량을 타고 차오양(朝陽)구에 있는 북한대사관으로 향했음.
- 리 국장은 북한의 핵 협상을 총괄하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수행해 지난 7월과 10월 뉴욕과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대화에 참석했던 인물임.
- 일각에서는 미국의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13~14일 신임 인사차 방중한다는 점을 들어 북미 간 접촉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음.
- 그러나 리 국장은 공항에서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



는 취재진의 물음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음.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신임 인사차 짧게 방중을 하는데다 데이비스 특별대표와 리 국장의 위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실제 북미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함.

● 北·中 부총리 회동...관계 강화 다짐(12/16)

- 북한의 한광복 내각 부총리겸 전자공업상이 15일 베이징을 방문, 장더장(張德江)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동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 두 부총리는 이 회동에서 양자 간 관계 강화와 교류·협력 확대를 다짐했음.
- 한 부총리는 북한은 전통적 우호관계 강화와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중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중국 국민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장 부총리는 북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며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우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음.
- 장 부총리는 또 한 부총리에게 지난 14일 폐막한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결과를 설명하며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구조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한 부총리는 중국정부 초청으로 중국을 실무 방문했음.

라. 기 타

● 北, 금강산특구에 외자기업 첫 승인(12/13)

- 북한이 추진 중인 금강산 특구에 첫 외자기업이 승인된 것으로 전해졌음.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13일 "홍콩과 조선족 자본이 투자한 외국기업인 조선 금강산금라선박 관광유한회사가 북한의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확인했음.
- 이 기업은 홍콩 자본이 미화 80만 달러(9억1천700만원 상당), 조선족 자본이 20만 달러를 각각 출자해 100만 달러의 등록자본금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기업은 크루즈 선박 운영을 통해 홍콩을 비롯해 중국 동부 항구에서 북한으로 관광객을 실어나르고 금강산 특구에서 카지노, 면세점, 호텔 영업을 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이 전했다.
- 크루즈 선박은 600명과 1천명, 1천800명 규모의 3척을 운영할 예정이며 관광이 활성화하면 러시아 지역도 취향할 계획임.
- 금강산금라선박 관광유한회사는 2026년 12월 말까지 경영 허가를 받았고 내년 1월1터 사무소를 개소할 것으로 전해졌음.
- 이 기업은 북한 당국이 현대아산의 독점권을 무시한 채 발효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처음으로 승인한 외자기업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업 분야도 현대아산과 비슷함.
- 현대아산 측은 특히 자사의 금강산 독점권을 북측의 금강산특구법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금강산금라선박 관광유한회



- 사의 승인은 또 다른 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현대아산이 기존에 사업을 벌였던 곳을 포함한 금강산 지역 60 km²를 국제관광지 겸 비즈니스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1단계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 계획은 60km²에 대해 인프라, 에너지, 전력 등 기초시설 건설투자는 특구관리위원회가 주도하고 기타 관광시설, 비즈니스 프로젝트투자는 희망하는 국가별로 구역을 나눠 자체 개발을 유도한다는 게 골자임. 기본적으로 무관세를 원칙으로 하되 각국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영업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임.
- 북한은 아울러 국제관광지와 비즈니스 지역에 골프장과 카지노, 경마장도 유치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음. 또 라선 특구와 금강산 특구를 만경봉호 등의 여객선으로 연결하고 철도와 고속도로, 항공편을 이용해 중국 관광객의 금강산 방문을 유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성과는 크지 않아 보임.

● **北고려항공 내년 유럽직항 무산(12/13)**

- 내년 북한과 유럽을 직항하는 전세기를 운영하려던 북한 고려항공의 운항 계획이 무산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했음.
- RFA에 따르면 스웨덴의 북한전문 여행사 '코리아 콘솔트'는 옛 소련 붕괴 이후 처음으로 재개될 뻔했던 북~유럽 직항노선 개설 계획이 고려항공과 베를린공항 간의 이견으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12일 자사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음.
- 이 여행사 관계자는 "양측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고려항공이 베를린 공항에 이착륙할 수 있는 시간을 배정받지 못했다"고 말했음.
- RFA는 고려항공이 김일성 생일 100돌을 맞는 내년 4~5월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평양~베를린 직항노선을 운행할 계획이었다고 전했다.
- 한편 고려항공이 유럽 직항 전세기로 사용하려 했던 기종은 승객 1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투폴레프 TU 204-100인 것으로 알려졌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외교부 "한미 FTA 발효 내년 1월 1일 어렵다"(12/12)**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가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2일 브리핑에서 "한미 FTA 발효 목표일이 내년 1월 1일이었지만 미국 쪽에서 국내법의 번역과 법률검토



- 작업, 연말연시 휴일 등으로 발효 목표일을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 최 대표는 "그러나 발효시기가 그렇게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업계에서도 약간의 지연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각에서는 국내에서의 한미 FTA 이행법률의 하위법령 정비작업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고 미국 측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발효한다'는 입장이어서 한미 FTA 발효시기가 1월 중·하순이 될 것으로 내다봤음.
 - 최 대표는 협정 발효 목표일에 맞춰 제·개정된 법안의 발효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행법령의 부칙에 발효는 한미 FTA 발효일과 일치하게 돼 있다. 미스매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 한·중·일 3국 간 FTA 협상개시 전망을 묻는 말에는 "16일 마무리되는 신관학 공동연구 결과를 내년 5월 중국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정상들은 그 결과를 갖고 3국 FTA 협상 개시시기를 논의한다"고 답변했음. 정상회의 논의 전까지 협상개시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임.
 - 최 대표는 한미 FTA 상 미국법·한국법의 지위와 불평등 논란에 대해선 "오해가 적지 않다"고 해명했음.
 - 미국에서는 한미 FTA가 이행법을 통해 국내에 적용되고 발효되기 때문에 FTA협정문이 연방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임. 일부에서 주법보다 한미 FTA가 열위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법의 FTA협정 위배는 연방법인 이행법에 어긋나 국제법상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 그는 우리 투자자가 미국법원에 권리구제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 "이는 국제법의 주체가 국가와 국제기구일 뿐 개인은 권리의 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음.
- **성김 "美 여수엑스포참여, 한미관계 의지표시"(12/12)**
- 성김 주한 미국대사는 12일 2012여수세계박람회(여수 엑스포)와 관련해 "미국이 여수엑스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 여수엑스포 미국 정부 대표인 김 대사는 이날 서울 정동 미국대사관에서 강동석 박람회조직위원장과 참가 서명식을 하고 "여수 엑스포는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 김 대사는 "한미 양국관계는 단순히 안보관계에만 머물지 않는다"면서 "교역과 인적교류 등 양국이 국제적으로 많은 분야에 협력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고 여수 엑스포는 이런 여러 분야를 망하는 행사"라고 강조했다.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김 대사를 여수 엑스포 미국 정부대표로 임명했으며 김 대사는 미국 정부를 대표해 여수 엑스포에 개설되는 미국관에 대한 감독업무 등을 대표하게 된다고 미 대사관측은



설명했음.

- 미국은 2012년 5~8월 열리는 여수엑스포에 1천100여㎡ 규모의 미국관을 열고 미국의 해양 환경과 해안 지역 공동체의 자연환경 등을 알리는 전시물과 프로그램을 소개할 예정임.
- 환경운동가인 필립 쿠스토 여수엑스포 미국관 대변인은 "미국관은 한국과 다른 나라 방문객이 건강과 복지, 해양환경과 자원 사이의 연결관계를 이해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음.

● **주한美대사관, 이란거래 국내기업과 접촉(12/13)**

- 미국 정부가 핵개발 의혹이 있는 이란에 대해 추가 제재를 내놓은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란과 거래한 국내기업과 접촉, 자국 정부의 이런 정책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13일 외교통상부와 미 대사관 등에 따르면 미 대사관 직원 3명은 지난 7일 해외 자원개발 업체인 대우조선해양E&R 등 3곳의 국내 기업을 찾아 이란과의 교역 현황과 앞으로의 대(對)이란 투자계획에 대해 물어봤음.
- 이들은 또 자국의 이란 제재안에 대해 설명했음. 대우조선해양E&R 관계자는 "이란과의 거래 내용을 알고 싶다며 미국대사관측이 사전 연락을 한 후 찾아왔다"면서 "우리는 현재 이란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없다는 것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음.
- 미대사관측은 "우리는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에 미국의 새 이란제재안에 대해 알렸으며 한국회사 3곳에 새 제재안을 알리는 일에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것도 외교부와 기재부에 통지했다"고 밝혔음.

나. 한·중 관계

● **한·중, 원자력안전 공조체제 논의(12/12)**

- 교육과학기술부는 중국국가원자능기구(CAEA; China Atomic Energy Authority)와 함께 13~14일 서울에서 제10차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 회를 연다고 12일 밝혔음.
- 두 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 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원자력 발전·연구개발(R&D)·핵연료·안전·방사선 이용 등 5개 분야 36개 의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 우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필요성이 대두된 원자력 안전 공조체제, 초고온가스 냉각로 기술 등 제4세대 원자로 관련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짐.
- 아울러 방사선을 이용한 식물 유전자원 개발, 원전 건설·운영,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 등 원자력 분야 전반에 걸쳐 다양한 공동 실천 계획도 논의됨.
- 교과부 관계자는 "원자력을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역 공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감하는 자리가 될 것"이



라고 설명했음.

- 한·중 원자력공동위원회는 한·중원자력협력협정(1994년 10월)과 교과부-국가원자력기구(CAEA)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을 위한 약정(1999년 10월) 등을 근거로 2000년부터 해마다 두 나라를 오가며 열고 있음.

● <韓中, 서해 흥기살인사건으로 마찰>(12/12)

- 서해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한국 경찰관을 흥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양국 간에 다소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서해상에서 불상사가 다반사로 발생하지만 이번 사건은 중국 선원이 불법 조업을 하고서도 체포에 불응한 채 흥기를 휘둘러 상대국 경찰관을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이날 낮 서울 도림동 청사로 장신선(張愼 <金 3개>森)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고, 오후에 이규형 주중 한국대사도 중국 측 채널을 통해 같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무엇보다 해당 중국 선원들을 한국 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것이라는 점과 차후 피해배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점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음.
- 앞서 이날 오전 6시59분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85km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던 66t급 중국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흥기를 휘둘러 한국 해양경찰관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중국 어선 선장 칭다위(42) 씨와 선원 8명이 인천해경으로 압송됐음. 칭다위는 살인 및 상해,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 대사관 측은 아울러 중국 어민들의 불법조업과 이를 단속하는 한국 해경에 저항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화면이 확보되는 대로 중국 측에 전달할 예정임.
- 대사관 측은 특히 이날 관련 채널에 중국 어민의 서해상 불법 조업과 흥기 저항 등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요청하고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음.
- 그러나 그동안 빈번하게 발생해온 서해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과 무력저항에 대해 한국 측이 많은 영상물과 증거자료를 전달해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해왔다는 지적도 없지 않음. 중국 측이 주중 한국대사관의 관련 자료를 전달받고도 상부로 보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이 때문임.
- 실제 중국 내 분위기는 서해는 물론 일본, 필리핀 등의 주변국 영해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적발돼 문제시되더라도 여전히 자국 어민 동정주의가 팽배해 있음. 특히 중국 관영 매체들도 통상 불법조업과 그에 따른 상대국의 단속, 그 과정에서의 마찰을 상세하게 보도하기보다는



- 상대국의 단속이 과도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기가 일쑤임.
- 그렇지만 그와는 달리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국 언론 매체를 인용, 사건 발생 개요만을 짧게 전하면서 논평을 삼가고 있음.
 - 중국 정부도 이번 사건을 신중하게 다루는 분위기임. 류웨이민(劉爲民)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에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며 "한국과 밀접하게 협조해 타당하게 처리하고자 한다"고 답변했음. 그는 그러면서 "한국 측이 (해당)중국 어민에게 합법적 권익 보장과 더불어 인도주의적인 대우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음.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대응하려는 기색임.
 - 장신선 주한 중국대사는 박석환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다소 몸을 낮췄음. 장 대사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음. 그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로서도 신속하게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비디오 자료 등이 있으면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음.
 - 일각에서는 중국에서 자국 어민에 대한 한국 해양경찰의 단속이 무리하다는 여론이 거세다는 점을 감안해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자제하면서 법에 따른 처리에 역점을 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주중 韓대사관, 공기총 추정 쇠구슬 피격(12/14)

- 중국 베이징(北京) 소재 한국 대사관에 공기총 공격으로 추정되는 쇠구슬이 날아들어 중국 공안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 이 사건은 13일 낮 12시 30분(현지시각)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의 점심시간 때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중 한국대사관이 14일 밝혔음.
- 외부에서 날아든 쇠구슬 때문에 대사관 내부 경제동(棟) 휴게실의 대형 방탄유리에 크게 금이 갔음. 대사관 측은 사건이 발생하고 수 시간이 지나 방탄유리가 파손된 것과 파손된 형태를 확인하고서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베이징 공안국에 신고했음.
- 베이징 공안국도 곧바로 출동해 현장 조사와 더불어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파손된 방탄 유리창을 면밀하게 촬영하고 공기총탄으로 보이는 쇠구슬을 거둬 간 것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음.
- 사건 발생 당시 총기의 격발음이 들리지 않았고 쇠구슬의 형태로 볼 때 공기총탄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음. 중국에서도 민간인의 총기보유를 불법이지만 수렵용 공기총은 허가되고 있음.
- 주중 한국대사관 측은 문제의 쇠구슬이 사람을 겨냥했으면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음. 대사관 측은 전 직원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하라고 지시하고 사건 원인 규명을 위해 중국 외교부 등 관계 당국과 협의에 들어갔음. 주중 한국대사관 개관 이래 이런 피격 사건은 처음임.
- 중국 공안당국은 일단 깨진 유리창의 상태를 면밀하게 조사해 어느 방향에서 문제의 쇠구슬이 날아들었는지와 누가, 어떤 목적으로 피격했는



- 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음.
- 이 사건은 지난 12일 서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의 선장이 한국 해양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중국에 대한 한국 국민의 감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발생해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실제 중국 선원의 한국 해경 살해사건 발생 이틀째인 13일 서울 효자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라이트 코리아, 대한민국고엽제전후회, 대한민국재경향우회 등의 보수단체 회원 300여명이 규탄 집회를 벌였음.
- 이 집회 과정에서 중국 국기를 불태우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달걀을 대사관에 던지는 등의 과잉행동이 빚어지면서 경찰관 충동을 빚었음. 승용차 한 대가 주한 중국대사관으로 돌진하려다 가로막고 있던 경찰 버스의 측면을 들이받기도 했음.
- 일각에서는 이런 한국 내의 중국 규탄 분위기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국에 전해지면서 이에 격분한 중국인이 공기총을 이용해 주중 한국대사관을 공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다. 한·일 관계

● 한·일 고위급 원자력안전 회담 열려(12/13)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강창순 위원장은 14~15일 일본 도쿄에서 호소노 환경대신, 일본 원자력위원장 및 원자력안전위원장, 경제산업부대신과 만나 두 나라 원자력 안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13일 밝혔음.
- 이번 회담은 지난 5월 도쿄에서 열린 제4차 한·중·일 정상회의 기간 한·일 정상간 합의된 '한·일 원자력 안전협력 구상(Korea-Japan Safety Cooperative Initiative)'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원자력안전 분야에서 처음 성사된 두 나라 장관급 회의임.
- 한국 측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필요성이 대두된 인접국간 원전 안전 협력 관계를 강조하고 구체적 행동 계획을 내놓을 예정임.
- 특히 평상·비상시 정보교류, 전문가 등 인력 상호과전, 긴급 사고시 사전통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 공조 등을 강화하기 위한 연례 장관급 회담 개최 방안도 제안함.
- 원자력안전위 관계자는 "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위한 한·일 두 나라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함으로써 국민에게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李대통령, 日총리에 위안부문제 우선해결 요구(12/18)

- 서틀외교 차 일본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에게 군 위안부 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촉구했음.
- 이 대통령은 이날 교토 영빈관에서 노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역내 평화안정을 위해 양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돼야 하고, 이를 위해 양국관



- 계의 걸림돌인 군 위안부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진정한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동북아는 북한의 핵개발 등 역내 역학관계가 재편되면서 평화·안정에 다양한 도전을 안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양국은 소통을 강화해 양자 현안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 차원의 공통 관심사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앞서 노다 총리는 "취임한 뒤 이 대통령과 직접 회담 3번, 국제회의를 포함하면 6번 회담을 했다. 서틀외교를 통해 양국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며 "양 정상 간 교류가 활발할 뿐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연간 500만 명으로 확대됐다"고 말했다.
 - 노다 총리는 "일한(日韓)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다"면서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동아시아 평화안정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며, 이 대통령과 저는 개인적 신뢰, 국민 간 교류를 기초로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마치고 노다 총리와 함께 교통의 대표적 문화명소인 료안지(龍安社)를 방문, 환담을 나눈 뒤 귀국길에 올랐다.

라. 미·중 관계

● 中, 美에 다시 '포문'..무역 갈등 심화(12/15)

-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중국이 미국산 자동차에 반(反)덤핑과 반보조금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포하자 미국이 반발했고 그에 중국이 다시 반박하는 양상임.
- 중국 상무부의 선단양(瀋丹陽) 대변인은 15일 성명을 내고 미국산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련 조치는 "법과 사실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선 대변인은 조사 결과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 생산한 자동차를 중국 시장에 판매한 탓에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 앞서 14일 중국 상무부는 자체 웹사이트에 배기량 2.5ℓ 이상 미국산 세단과 SUV(스포츠 유틸리티 차량)를 포함한 수입 자동차에 대해 2013년 12월14일까지 2년간 반덤핑과 반보조금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 구체적으로 반덤핑 관세는 BMW(2.0%), 메르세데스 벤츠(2.7%), 혼다(4.1%), 크라이슬러(8.8%), 제너럴 모터스(8.9%), 기타 미국 차량(21.5%)에 적용됐다. 반보조금 관세는 크라이슬러(6.2%), 제너럴 모터스(12.9%)가 해당됐다.
- 그러자 미국이 즉각 반발했음. 미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중국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하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행하게도 미국 등 무역상대국에 대한 있을 수 없는 보복의 또 다른 실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중국에서는 지난 8일 미국이 자국산 닭고기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 및



-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해 WTO에 분쟁 해결을 위한 패널 구성을 공식 요청하고 중국산 철강 실린더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하자 '보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음.
- 일각에서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중국의 반덤핑·반보조금 관세 부과 조치는 최근 잇단 미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한 대응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거슬러 가보면 지난 10월 11일 미국 상원이 중국을 사실상 환율조작국가로 지정하고 위안화 보복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반덤핑·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하면서 미중 간에 무역 갈등의 서막이 올랐다는 지적임.
 - 중국은 자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과 '연합'해 미 정부의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히는 가하면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미국이 보호무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 태양광 패널, 닭고기, 철강 실린더에서 자동차로 확대된 미중 무역 갈등은 그동안 양국이 대립각을 세웠던 지적재산권 보호,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마. 미·중 관계

● 日, 美에 이란산 원유수입 특례 요청(12/15)

- 일본 정부가 이란산 원유의 수입 금지를 피하기 위해 미국에 특례조치를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15일 이 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미 의회가 검토하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로 일본의 이란산 원유 수입에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특례조치를 미국에 요청했음.
- 일본은 원유 수입의 10% 정도를 이란에 의존하고 있음. 일본은 추가 제재로 원유 가격이 상승할 경우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음.
- 일본의 외교 소식통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때문에 석유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일본에는 있다"고 설명했다.

● "주일미군 출퇴근 음주사고 예외 없이 日에 재판권"(12/17)

- 주일미군이 출퇴근길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때 예외 없이 공무와 상관없다고 보고 일본이 기소·재판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이 17일 일제히 보도했음.
-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郎) 외무상이 16일 외무성에서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오키나와(沖縄)현 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미일 주둔군지위협정(SOFA) 운용방침을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음.
- 지금까지는 미군이나 군무원이 출퇴근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 내더라도 군이 주최하는 파티 등 공적 행사에서 술을 마셨다고 해명하면 '공무 중'이라고 인정돼 기소·재판권이 미국으로 넘어갔음.
- 이는 미국과 일본이 1956년 합동위원회에서 미군이나 군무원이 자택과 부대를 오가는 출퇴근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공무외(外)로 보되 공적 행사에서 술을 마셨을 때에는 공무중이라고 인정한다는데 합의했기 때문임.
 - 하지만 미군이나 군무원의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를 본 오키나와 주민들이 잇달아 불만을 제기했고,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 이전 문제에도 영향을 주자 미일 양국이 다시 합동위원회를 열어 SOFA 운용방침 개정을 논의했음.

바. 중·일 관계

● 日 언론 "중국어선 흥포화" 비판(12/13)

- 일본 언론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부가 단속에 나선 한국의 해양 경찰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중국 어선이 갈수록 흥포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음.
- 일본의 유력지인 아사히신문은 13일 조간에서 남획으로 어업자원이 고갈되자 중국 어선이 2000년대 들어 한국 해역에 자주 출몰해 불법 조업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음.
- 이 신문은 중국 어선은 한국 해경의 단속에 쇠파이프와 죽창으로 저항하고 있다면서 중국어선 횡포로 속을 태우는 한국이 일본과의 정보 교환을 진전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 교도통신은 한국 해양 경찰 관계자를 인용해 일상적인 단속 활동이 중국 어선의 무력 저항으로 위험천만해지면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 됐다고 보도했음.
-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들어 서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과 한국 당국의 충돌이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중국 어선이 폭력적 수단으로 대항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론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 이 신문은 한국에서는 2008년에도 단속 중이던 해경이 중국 선원에 머리를 구타당해 숨진 적이 있지만 검찰이 범인을 불기소처분해 중국에 강제송환하면서 '약체 외교'라는 비판을 불렀다고 보도했음.
- 도쿄신문은 중국 외교부가 자국 어부가 한국 해양 경찰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한국과 밀접하게 협력해 적절히 처리 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죄 발언은 없었다고 지적했음.
- NHK방송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중국 어선의 잦은 불법조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한국 해경의 단속에 폭력과 무기를 사용해 격렬하게 저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 日 노다 총리, 25~26일 중국 방문(12/14)

-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이달 하순 중국을 방문한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 보도했음. 이 신문에 의하면 노다 총리는 당초 이달 12~13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중국 측의 요청으로 방문 일정을 25일과 26일로 조정했음.
- 중국 측은 노다 총리가 이달 28~29일 방문해주길 희망했으나 노다 총리의 인도 방문 계획 등으로 인해 이같이 일정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음.
- 노다 총리는 이달 25일 중국에 입국해 다음날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며, 원자바오 총리와의 만남 계획임.

사. 기 타

● 한·중·일 FTA 공동연구 쟁점 완전 타결(12/16)

-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3개국의 무역자유화를 향한 첫 단추가 성공적으로 꿰어졌음 3국간 FTA(자유무역협정)가 성사되면 인구 15억 명, GDP 12조 달러에 달하는 동북아경제권의 관세 없는 자유무역이 가능해져 역내 경제통합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됨.
- 세 나라 대표단은 16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폐막한 제7차 한·중·일 FTA 신관학 공동연구 제7차 회의에서 남은 쟁점들을 타결하고 2010년 5월부터 진행된 공동연구를 공식 종료했음.
- 3국은 이날 채택한 공동연구 보고서를 문안 검토, 경제통상장관회의, 외교장관회의를 거쳐 내년 5월 베이징 3국 정상회의에 보고할 예정임. 이날 공동성명은 "3국 FTA가 양자 간, 3자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시킬 뿐 아니라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광범위한 협력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모두 윈-윈-윈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았음.
- 또 "아세안+3, 아세안+6과 같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진행되는 경제통합 과정에 이바지할 것이다. 한·중·일 FTA가 실현 가능하고 3국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세 나라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합치성 ▲이익 및 균형 ▲민감부문에 대한 고려 등 향후 협상에서 고려해야 4가지 원칙을 제시했음.
- 관심이 많았던 농산물 등 상품챕터와 서비스챕터는 '각국이 민간 분야를 고려하면서 관세·비관세장벽, 무역장벽을 제거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예들려 표현해 개방수위의 논란을 본협상으로 미뤘음. 투자챕터에서는 '외국인 투자 제한조치를 적절히 철폐할 것과 투자보호 강화를 강화할 것'이 권고됐음.
- 내년 정상 간 합의를 통해 FTA의 협상 개시가 선언되면 3국은 본협상에 착수해 2~3년간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개방수위를 저울질하게 됨. 협상이 타결되면 서명-비준 등 절차를 거쳐 FTA를 발효함.
- 14일부터 열린 이번 7차 공동연구에는 최석영 FTA교섭대표, 중국 측



상무부 총취안 국제무역담판부대표, 일본 외무성 니시미야 외무심의관 · 경산성 오카다 경산심의관 등을 수석대표로 3국의 신관학 대표 100명이 참석했음.

● 美, 방위비 감축 전제 한·일에 분담 증액 요구(12/18)

- 미국이 재정적자 확대로 국방비 감축이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한국과 일본 측에 향후 방위비 분담 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음.
- 미국은 정부 관계자들과 전직 관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15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6차 한미일 3자 협력대화(TDNA: Trilateral Dialogue in Northeast Asia)에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18일 이번 대화에 참석했던 한국과 일본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 측 참석자들은 '미국 납세자들의 의무가 가중되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뒤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대응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음.
- 미국 측은 의회가 초당적으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1조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출삭감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1조2천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을 무조건 삭감해야 하는데 그 절반이 국방예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미국 국방예산은 최소 6천억 달러 이상 삭감이 불가피해질 수 있음. 이는 연간으로 환산할 때 매년 한국의 국방비(지나 해 경우 245억 달러)보다 많은 규모임.
- 미국 측은 특히 현재 미 의회 내에서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과 일본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계획 등 동북아 미군기지 재편에 대한 검토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TDNA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지낸 스티븐 해들리를 비롯해 미국의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가했음.
- 이에 대해 한국 측의 한 참가자는 "한국 내에서 큰 논란이 일어나는 현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특히 한미일의 협력관계가 강화될 경우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 이 참가자는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솔직하게 의견을 개진해 보자는 게 TDNA의 취지"라면서 "미국의 국방비 감축은 필연적으로 전 세계 미군 병력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미국의 비용분담(Burden Sharing) 요구가 조만간 우리 측에도 전달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또 다른 한국 측 참가자는 "미국의 비용분담 요구가 매우 강력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감내할 수준이 될 것인지가 향후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재 한국 측은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전체 비용 가운데 약 40%가량을 부담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미국 측이 조만간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한국 측 분담비율을 50% 수준으로 높이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번 대화에는 한국의 정의용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상임위 공동의장 겸 사무총장, 데이비드 생어 뉴욕타임스 워싱턴 지국장, 아비오던 윌리엄스 미국 평화연구소(USIP) 부소장, 안영집 외교통상부 북미국 심의관, 이시이 마사후미 일본 외무성 정책총합국 부국장 등이 발표자 또는 패널로 참가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